

형식적 법치 권위주의와 중국 국민의 저항 : ‘공민불복종’ 개념의 이론적 정초와 분석

정주영*

본 연구는 “시민 불복종” 이론을 중국적 맥락에 의거하여 조작적 정의를 가한 “공민 불복종”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 불복종은 근대국가 수립 이후 시민의 국가에 대한 저항을 일상적 범위 안에서 권리화한 것으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체제와 법질서를 존중하고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시민 불복종 개념은 중국에 적용함에 있어 완벽하게 이론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의식을 가진 명확한 주체의 존재,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 체제 전복이 아닌 체제 수정적 목표와 저항, 비폭력적 위법행위이라는 시민 불복종의 최소 정의의 기본적 내용을 수용하되 중국적 맥락에서의 차이를 수용하여 “공민 불복종”으로 재개념화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공민 불복종 개념을 법치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행해지는 체제 전복적이지 않은 위법적 비폭력적인 국민의 저항행위로 잠정적으로 규정하고 천안문 사건과 백지시위로 대표되는 중국 대중들의 대규모 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도적 제약과 감시 사회 속에서 등장한,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는 혁명과 폭동의 이론 틀로 분석할 수 없는 과도기적이고 제약적인 저항행위의 정치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공민 불복종을 통해 분석한 중국의 저항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맞서는 것을 넘어서 중국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저항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 공민불복종, 시민불복종, 중국 권위주의 통치, 중국 정치, 저항 이론, 백지시위, 천안문 사건, 중국 국가-사회 관계

* 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연구소

I. “천안문 사건”에서 “중국의 저항” 구하기

중국 사회에서의 저항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할 개념적·이론적 틀이 부재하다. 서구에서 발전한 시민사회론이나 시민불복종 개념은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와 저항 행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일정한 유용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구조적 한계도 노정한다.

1989년 천안문 시위 이후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서구적 시민사회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시기 주요 쟁점은 중국에 서구와 같은 시민사회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였다.(Weigle & Butterfield, 1992; White, 1993; 백영서, 1994; 김재철, 1999) 그러나 중국에서 시민사회 찾기는 실패하였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민사회를 중국적 맥락에서 재규정하거나 국가조합주의 등의 다른 분석틀로 접근하였다.(김영진, 1996; 정연식, 1999; 정주영, 2001; Anita chan, 1993; Unger & Chan, 1995; 張靜, 1998) 이후 중국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저항이나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권익보호 활동의 분석에 다양한 저항 이론들이 적용되었으나 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일상적 반응으로 한정되거나 국가의 통치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불복종의 구체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Tomba, 2002; Read, 2003; Watson, 2008).

중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저항 행위들에 대한 체계적 이론화나 개념화의 부재는 천안문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넘어 모든 집단적 저항의 해설틀로 만들었으며, 중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저항행위들조차도 감정적·정치적 상징의 모호한 언어들로 환원되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백지시위 역

시 국내외 언론과 학계에서는 그 규모와 전국적 확산 정도, 체제비판적 성격을 근거로 천안문 사건과의 유사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Yuchen Li, 2024; Henry, 2022). 그리고 백지시위에 대한 질문은 “제 2의 천안문 사건이 될 것인가” “천안문 사건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에 집중되었다²⁾. 이는 중국 사회에서 저항이라는 현상이 ‘천안문’이라는 기표 아래 개념 없이 소비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분석의 한계는 중국의 저항을 동기와 구조, 행위의 방식,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구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개념들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중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저항이라는 정치적 실천을 보다 정밀하게 이론화하기 위하여 “시민 불복종” 이론을 중국적 맥락에 의거하여 조작적 정의를 가한 “공민 불복종”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민 불복종은 근대국가 수립 이후 시민의 국가에 대한 저항을 일상적 법리 안에서 권리화한 것으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체제와 법질서를 존중하고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분노의 폭발로 인한 무질서한 저항행위인 폭동이나 기존 체제와 질서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혁명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정치참여가 제도화되어 있고 일정한 자유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억제된 중국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제약과 감시 사회 속에서 등장하는 중국 대중의 저

²⁾ 인류학자 Eric S. Henry는 백지시위에 대해 들으면서 1989년 천안문 시위의 데자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백지시위가 걸로로는 코로나19시기의 방역조치와 봉쇄에 관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을 글로벌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톈안문 이후 사회 계약에 대한 환멸이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Henry, 2022, 175-182)

항행위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를 포착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로 중국적 맥락에서 “공민 불복종”을 개념화하고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는 혁명과 폭동의 이론 틀로 분석할 수 없는 과도기적이고 제약적인 중국의 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구 자유주의 전통에서 발전한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특정한 도덕적 행위로서의 저항을 전제로 하지만, 중국에서는 저항이 체제 내부의 제도와 규칙을 활용하며 전개되며, 국가의 규율 속에서 주어진 ‘공민’(公民)의 법적 정체성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처럼 중국 인민대중의 저항 행위는 ‘시민’이 아닌 ‘공민’이라는 국가적 주체의 지위에서 행해지는, 독특한 유형의 체제 내 불복종이다. 이들은 법적 제도나 국가 규범의 언어를 도구로 삼아 제한적인 권리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한다.

본 논문은 서론의 문제제기에 이어 2장에서 첫째,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 저항 담론의 개념적 공백과 상징화 과정을 검토하고, 2장에서 시민 불복종 이론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공민불복종’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초한다. 4장에서 천안문 사건에서 백지시위, 이후의 미시적·내재적 저항에 이르기까지의 사례를 통해 ‘공민불복종’의 궤적을 추적하고, 결론적 5장에서 개념이 지닌 정치적 함의와 이론적·현실적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해석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권위주의 체제하 공민 저항의 이론화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중국 저항 담론의 이론적 지형과 공민 개념의 체제 내 재구성

1. 저항 개념의 이론적 공백과 역사적 상징화의 과정

1) 중국 저항연구와 분석의 이론적 한계

중국 현대사의 저항은 단순한 정치적 불복종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급진적 운동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일상생활의 억압에 대한 대응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마오쩌둥 시기의 저항은 반우파 투쟁, 문화대혁명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내 권력투쟁과 대중 동원이 혼합된 특수한 저항의 형태를 보였다.³⁾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인민 대중의 저항에서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안문 사건이다. 천안문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서 국가폭력과 대중저항이 충돌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경제 성장과 사회 다원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정책 집행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었고 특히 1980년대에는 민주화 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저항은 점차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⁴⁾. 이러한 경제적 요구와 제도 내부의 불만으로 지식인·학생 중심의 민주화 요구가 전적인 대중저항으로 확산된 사건이 천안문 사건이다. 천안문

3)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은 '반혁명분자'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통해 체제에 대한 저항을 억눌렀고, 이는 개별 시민의 정치적 표현 공간을 축소시켰다.(Perry, 2002)

4)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의 전개 속에서 중국 사회는 점차 복잡해졌고, 이는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과 불만으로 나타났다.(O'Brien & Li, 1999)

사건의 발생과 함께 서구적 시민사회론으로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대항적(counterailing)’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공간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반인 토크빌 류의 시민사회(Tocqueville, 2000)와 코헨과 아라토 류의 자율적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시민사회(Cohen & Arato, 1992)는 공산당 일당체제의 권위주의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의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시민사회가 정치 국가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의 대표적 민주주의 이론가 위커핑조차 인정하는 것이었다(俞可平, 2002).

그러나 중국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서구 이론들의 한계는 시민사회 개념 자체가 근대 유럽의 특수한 사회-국가 분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는 태생적 특수성을 무시하거나 보편 이론으로 오용한 데 기인한다.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는 공산당 일당체제, 민족주의적 정체성, 경제와 정치의 결합 통치 구조, 통제된 법치 등의 특수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며, 시민사회가 자율적 행위자로 존립할 수 있는 제도적 전제들이 결여되어 있는 토대적 조건에 기반한다. 그 결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공민 저항은 서구의 시민사회론이 설명하는 ‘국가에 대한 자율적 반대’보다는, 국가와의 제한적 협상, 체제 내 발언, 제도화된 저항의 형태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중국적 맥락에서 국가와 사회의 상호 침투성과 복합성을 반영하여 저항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에 공백이 발생했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 1990년대 이후에도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저항은 개별 사안 중심의 분절적 항의(fragmentary protest), 청원운동(petition politics), 지역사회 시위등으로 변화하였으며, 소유권의 강화와 이익 분화에 따라 시위는 주체와 방식 측면에서 더욱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환경오염, 토지 수용, 부패 문제

등 생활 기반 문제에 대한 항의가 주류를 이루며 비정치적 저항이 일상화되었다(Hung, 2011; Lei. & Yang. 2019; Paik, 2012). 또한 2010년대 온라인 공간과 청년 세대의 등장은 중국의 저항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저항의 장을 열었고, 미디어 검열과 국가 통제를 피해 우회적이고 상징적인 저항이 온라인에서 전개되었다. 홍콩 시위, 페미니즘 운동, 백지시위 등은 모두 청년 세대의 참여와 국제 이슈에 대한 감수성을 반영하며, 국가와 시민 사이의 새로운 긴장관계를 드러냈다.

이 시기의 중국 저항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개진되었다. 중국의 저항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케빈 오브라이언(Kevin J. O'Brien)은 여러 저작들에서 사회운동 이론을 적용하여 노동자 시위, 환경 항의, 도시 철거 반대 운동 등 중국 대중들의 다양한 저항 사례를 분석하였다.(O'Brien, 2006; 2008; 2015) 또한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억압된 하위 주체들이 행하는 규칙 무시, 게으름, 소문 유포 등 은밀하고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에 대한 스캇(James Scott)의 이론은 현대 중국 청년들의 국가 권력에 대한 비가시적, 은밀한 대응 연구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Scott, 1985; Feng, 2015). 불만 세력이 중앙 권위에 직접적인 청원이나 행정적 절차를 통해 개선 요구하는 청원 정치(Petition Politics)의 분석틀도 권위를 수용하며 권리에 기반한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현대 중국을 설명하는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Hung, 2011; Lei. & Yang. 2019).

그러나 이들 개념은 일상적인 저항이나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반응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 제도적으로 진화한 중국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 등장한 정치적 주체성 또는 공적 저항성의 특징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건과 사례 중심의 연구를 하거나 체제 내 합법적 언어로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대 중국 저항

의 특징은 체제 외부에서의 전복적 저항보다는 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제한적 저항이며, 법과 제도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내 저항의 축적된 역사적 궤적 위에서 탄생한 중국 저항의 주체와 구조,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들이 필요하다.

2) 개념의 부재와 상징의 과잉

서구의 시민사회론은 국가를 억제하거나 견제하는 시민적 공간을 전제하며, 중국 내 자발적 집단행동을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나타나는 저항 행위들은 반드시 국가와의 전면적 충돌이나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종종 체제 내 자원(법제도, 합법성 담론, 애국주의 정체성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저항'은 제도 바깥에서의 전복적 실천이 아니라, 제도 내부에서의 협상과 전술적 개입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개념화하거나 이론화하는 데 실패하였고, 개념 수립의 실패는 중국 저항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중국 저항에 대한 서구적 분석 개념과 이론의 실패는 천안문 사건이 갖는 상징성에 집중하게 했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한 중국의 저항 행위의 평가에 천안문 사건이 과도하게 반복·참조되면서 천안문 사건은 중국 저항 해석의 프리즘이 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제2의 천안문'으로 환원시키는 분석적 경향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정작 천안문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다양하며, 실제 시위의 요구와 지향은 일반적 평가 및 기대와 다르다는 것이 주된 평가이다. 즉, 천안문 사건은 민주주의 요구, 부패 반대, 표현 자유 등 다양한 요구가 집약된 집단행동이었으며, 그 이후의 중국 저항은 이와는 다른 양태

(분산적, 비가시적, 비공개적)를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프레임’의 강력한 형성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서구 자유주의적 기대와 연결지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 다양한 저항은 고유한 정치적 함의나 행위성을 분석 받기보다는, 민주화라는 ‘예외적 사건’의 재연 가능성으로만 환원되곤 했다.

천안문은 분석의 상징이 아닌,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으로 중국 저항의 하나의 사례로 위치지어져야 한다. 이는 천안문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적 저항을 설명할 수 있는 학술적 개념과 분석틀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이다.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 및 정치적 저항을 분석하기 위해 체제 내 협상과 제한적 참여, 비공식적 저항 등 복합적 현실을 반영하는 분석틀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국 저항의 연속성과 다층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사건 중심 분석’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최종적으로 ‘저항’을 ‘복종’의 반대말 혹은 반체제 행위라는 단순화된 규정을 넘어서 체제 내에서 공민으로서의 주체적 실천이 갖는 복합적 정치행위로서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2. 권위주의의 진화와 ‘공민’·‘저항’ 개념의 재구성

1) 권위주의의 진화와 ‘공민’ 개념의 재구성

권위주의는 중국의 현재의 정치체제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모델이다⁵⁾(정주영, 2017; 정주영, 2019).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현

5) 2017년 1월에 중국 국제정치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이상적인 정치발전모델과 중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치발전모델을 묻는 질문에 권위주의를 선택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 구체적으로 법치에 기반한 권위주의(42%), 탄력적

상들은 권위주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체제적 전제에 기반하여 논의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중국의 권위주의는 정치적 변화과정에서 생물처럼 진화하여 기존 권위주의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권위주의는 민주와 비(非)민주라는 이분법적 범주(Linz, 1964)를 깨고 정치적 자유와 억압 사이의 중간적 상황으로의 권위주의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Schedler, 2006 : 1-23) 중국의 권위주의는 심지어 중국 성공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기도 했다(Nathan 2003, 6; Zakaria, 2008, 41). 중국 자체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합리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왔다(정주영, 2019, 134-138). 그 변화의 동인이 서구적 민주로의 전환이 아니라 공산당 일당독재의 강화라는 기본 전제하여 추동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즉, ‘모든 중국 연구’는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속성과 변화에 대한 분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로, 그리고 법치 정당성에 기반한 권위주의 통치의 정교화는 중국 정치적 주체의 정체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인민에서 공민으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인민에서 공민으로의 주체의 변화는 중국에서 국가-사회 관계, 국가-대중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현재의 변화와 미래 변화를 추동해가는 핵심 변수이기도 하다.

‘인민’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국가 정권의 주체였다. 그러나 인민은 철저히 정치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 배타적 개념으로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찬성하고 참여하는 계급, 계층 그리고 사회집단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들은 반혁명세력, 즉 적에 대해 배타적 민권인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专政)’의 모든 권리를 향유했다(毛泽东, 1949). 그러나 개혁개방 이

권위주의(24%), 기타(24%), 신권위주의(7%), 서구식 민주주의(3%)로 권위주의 형태의 정치모델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73%였다.(정주영, 2017)

후 헌법상 중국의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공민’이 공식적인 국가의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 3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사람은 공민이며,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제2장)을 규정하고 공민의 자유권과 관련한 조항(제35조)을 통해 공민의 언론, 표현, 집회, 결사, 행진 및 시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宪法, 2018).

그러나 인민과 마찬가지로 공민 또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정권 유지에 협력하고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였다.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계열의 ‘계급적 대중’ 개념에서 유래되는 개념적 의미를 가지며 혁명적 주체로서의 과거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적(敵)’과 구분되는 ‘우리(人民)’로 구성되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표하는 개념으로서의 인민은 혁명의 과정에서 ‘당과 국가’를 위한 감정적 연대와 충성 요구받아 왔다. 그리고 인민에 대한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에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에 대한 요구는, 서구적 의미의 정부를 견제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권 인식을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인민민주주의의 통치 논리에 기반한 인민 개념의 연장선에서 ‘공민’ 또한 헌법상의 권리를 갖는 존재이지만 정치적 권리보다 의무와 도덕적 책무가 강조되었다. ‘공민’은 곧 ‘국가의 정치적 자산’이자 ‘도덕적 책무를 지닌 존재’로 간주되었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은 국가의 안전·통일·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헌법 51조와 54조)에 제약받는 공민의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헌법 제35조)의 법적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⁶⁾ 국가로부터 규율된 존재(국가

6) 이에 대하여 제54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제51조 제35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민

주의적·의무 중심의 규범적 주체)로서의 중국 공민의 특징은 ‘공민교육’(公民教育)을 통해서 강화되었다. 중국에서 공민교육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정치적 이념 수용을 포함하며, 정치적 참여는 제도 내로 제한된다. 시민 개념의 핵심인 ‘자기 통치(Self-rule)’나 ‘정치적 비판성’은 사실상 교육 및 제도 설계에서 배제된다.(Zhao, 1998) 공민교육 과정에서 ‘자율적 시민’이 아닌 ‘국가-지시형 주체’로서의 중국의 정치 주체로 구성된 중국 공민은 정권 유지에 협력적이고 체제적 적응적 속성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민의 저항 역시 체제 내 논리의 제약에 강하게 구속되는 경향을 띄게 된다.

이러한 중국의 ‘공민(公民)’ 개념은 서구의 시민(citizen)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이념적 기원에서 형성된 특징을 가진다. 공민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서구적 시민과 공민의 차이

구분	서구적 시민 개념 (Citizen)	중국의 공민 개념 (Gongmin)
철학적 기원	자유주의, 사회계약론	마르크스주의, 집단주의
주체성	독립적·자율적 개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규율된 존재
권리·의무	권리 중심 (자유, 참여)	의무 중심 (국가 충성, 법 준수)
정치 참여	정부에 대한 비판 가능성 포함	당과 국가 이념 수용을 전제로 함
교육 내용	비판적 사고, 시민 책임	애국주의, 공산당 이념 중심

공민의 저항은 기존의 ‘시민’ 개념을 전제하는 시민불복종 개념과 충돌하며, 저항의 근본 동기와 방식, 지향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민’ 주체가 수행하는 저항을 별도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현대 저항의 궤적에서 ‘공민’의 등장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주

들의 자유는 “국가, 사회, 집체의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법에서 인정한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여 앞서 명시한 자유의 권한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宪法, 2018)

목해야 하는 것은 공민이 갖는 내재적 제약성이 아닌 저항의 확장성과 전략성이다. 중국적 맥락에서 ‘공민’이 갖는 저항 주체로서의 개념적 특징은 ‘인민’ 개념과의 비교에서 더 명확해진다. ‘인민(人民)’과 ‘공민(公民)’은 모두 정치적 주체를 지칭하는 용어지만, 이들이 국가와 맺는 관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저항 가능성에서 구조적·역사적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공민은 인민에 비해 현대적 ‘권리’ 개념을 내면화하고, 체제 내 언어를 통해 전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인민을 주인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적 논리와 공산당이 갖는 전위부대로서의 영도적 지위는 당과 인민을 일치화시키고 인민 저항의 논리적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인민-국가와의 관계에서 인민의 당과 국가에 대한 저항과 전복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 상황하에서의 집단적 폭동 혹은 정권 변화의 배경은 될 수 있으나, 저항에 대한 제도적 언어와 권리 담론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상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민법 등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규정된 공민은 표면적 권리 보장과 실질적·내용적 의무와 충성에 대한 요구가 병존하는 ‘양면적 구조’의 제약속에서 여전히 국가로부터 규율된 존재로서의 속성을 가지지만 ‘법률 언어를 활용해 국가를 상대로 권리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즉, 인민에서 공민으로의 전환은 집단적·수동적 주체에서 권리 담지자로서의 전략적·제도적 주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민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국가와의 수직적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행위자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항이론에서 ‘공민’의 중요성은 ‘공민’ 개념이 중국 정치체제에서 단순한 제도적 용어가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품은 새로운 정치적·전략적 주체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표 2〉 인민과 공민의 차이

항목	인민 (人民)	공민 (公民)
개념적 기원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마오주의 담론에 기반	법치주의 국가 이념 및 헌정 질서에 기반
정치적 의미	혁명적 집합 주체로서의 계급적 범주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 개인으로서의 시민
국가와의 관계	국가의 보호 대상이자 정치적 동원 대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법적 책임 주체
주체성의 성격	집단적, 계급 중심적	개인적,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
권리와 의무	국가에 의해 부여되며, 계급성과 정치충성에 따라 달라짐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비교적 평등하게 부여됨
통치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사회주의의 계급 이데올로기의 구성 요소	현대적 국가 통치 정당성(법치·제도화)의 기반 요소
사용 맥락	사회주의·혁명 담론에서 강조 ("인민의 적", "인민해방군")	헌법, 법률, 국가행정 시스템에서 사용 ("공민권", "공민의 의무")
저항과의 관련성	저항의 주체라기보다는 국가 권위의 정당화 수단	제한된 조건 하에서 체제 내적 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음

저항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공민’ 저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국가로부터 규율된 국가-지시적 주체이면서 법적·정치적 주체로서의 공민은 저항에서 권리 담론의 전략을 활용한다. 공민은 국가와의 직접적 대립을 회피하는 대신, 국가가 천명한 원칙(법률, 헌법, 정책)을 재귀적으로 환기시키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발생하는 중국에서의 저항은 법으로 보장된 공민적 권리에 기반한 권리수호 운동(维权)이 주를 이룬다. 저항하는 공민은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위에 대해 체제에 단순히 청원이나 호소가 아닌 체제의 이념과 제도를 스스로 활용하여 국가를 상대로 권리 주장을 수행한다(Han, 2023). 둘째, 공민은 합법적 프레임 내의 불복종을 수행한다. 법원 제소, 언론 노출, 공적 발언의 형태로 ‘제도 안의 저항’을 실천함으로써 체제 전복의 직접적 목적보다는 그 안에서 국가-개인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공민적 저항은 ‘국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에 기대어 국가의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시 이중적이다. 중국의 권위주의는 통치 방식과 구조에서 점차 정교화, 세련화 되어 가고 있다. 법치적 정당성에 근거한 통치 방식의 전환과 함께 ‘모든 것을 탄압’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저항은 ‘흡수’하고, 체제 도전적 저항만 분쇄하는 방식으로 저항에 대한 분절화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국민의 저항은 체제의 ‘법치 정당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이를 억제하면서도 완전한 억압보다는 통제와 유도 전략(검열, 조기 개입 등)을 병행하는 것이다.

2) 국민의 등장과 ‘저항’ 개념의 변화

정교화된 통치·억압 전략을 구사하는 법치 권위주의하에서 정치적·전략적 저항 주체인 ‘국민’의 등장이라는 조건 하에서 저항은 더 이상 전복적·집단적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체제의 정당성에 기반하여 합법성의 언어로 저항하는 국민의 등장은 ‘저항’을 단지 체제 전복이나 급진적 항거로 이해하는 기존 틀을 넘어, 체제 안에서, 체제의 언어와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적 실천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저항이 반국가가가 아니라, 국가 내부 질서의 ‘자기 모순’을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전통적 저항이 기반하던 도덕적 정당성에서 제도적 정당성으로 전략의 중심점을 이동시키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 저항은 반드시 공개적 시위나 급진적 거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과 제도 내부 활용을 통해 수행되는 저강도 전략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는 저항의 방식은 헌법 조항에 근거한 행정소송, 사회 문제에 대한 온라인 담론 형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이의

제기 등 제도 내의 ‘합법성’을 기반으로 한다. 예컨대, 환경오염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환경보호법을 근거로 지역 정부를 상대로 행정 절차를 요구하거나, 위챗 및 웨이보를 통해 사회적 부조리를 ‘권리 회복’의 언어로 호소하는 방식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 반발이 아니라 내부 규칙을 활용한 정치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 권위주의의 정교화는 저항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안전한 저항의 형식’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민은 ‘저항할 수 있는 시민’으로 기능하면서도, 그 저항은 권리 언어, 제도 전략, 절차 활용이라는 새로운 실천의 장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저항은 단순한 서구적 시민불복종의 이식이 아니라, 중국 정치구조의 내적 모순을 활용한 전략적 저항 행위의 가능성으로 이론화되어야 한다.

III. 시민불복종에서 공민불복종으로: 중국적 저항 개념의 전환

1. 시민불복종 이론의 개념과 권위주의 맥락에서의 적용 의의

‘저항(resistance)’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않고 거역하거나 버티는 것을 뜻한다. 저항이 하나의 권리가 될 때, 즉 저항권은 말 그대로 불의(不義, injustice)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된다. 이 저항권은 16세기 이후 서구 근대국가 수립과 시민권 형성의 역사 속에서 정의롭지 않은 국가권력을 국민이 나서서 폐지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해왔

다. 때문에 서구에서의 저항권은 전통적으로 구권력의 폐지와 새로운 권력체계의 구축을 의미하는 혁명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며, 로크의 체계화와 프랑스인권선언 및 미국독립선언에서의 명문화를 통해 면면히 계승되었다(오승철, 2009). 이러한 혁명적 의미에 기반한 저항권을 일상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려 시도한 것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였다. 19세기 중반, 소로우는 그의 저서 『Walden ; and, Civil disobedience』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할 권리를 주장하며, 민주주의 발전에서 대중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Thoreau, 1986). 소로우는 실제 노예제도와 멕시코에 대한 전쟁에 반대하며 시민불복종을 실천적 행위를 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시민불복종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는 거의 대부분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에서 출발한다.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한 롤즈는 시민불복종을 민주 정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했다(존 롤즈, 1990, 376).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시민불복종의 이론은 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저항’은 고전 시민불복종에 내포된 체제 전복적인 ‘혁명’의 의미가 제거되고 체제 내의 제도화된 저항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법률과 정부의 정책이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수자를 향한 불복종 행위라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이다(오현철, 2001, 37).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시민은 불복종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복종을 의무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로우의 역시 그 불복종의 목

적을 즉각적이고 혁명적인 정부 전복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하는 것에 두고 있었다(소로우, 2009, 16). 롤즈 역시 시민 불복종을 한정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사회 계약론자인 롤즈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올바른 민주 정부”를 전제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시민 불복종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시민불복종은 이미 구제 불가능한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오용이나 남용의 발단을 없앴으로써 예외적인 불법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일상에서의 법 수호 의지로 나타난다. 롤즈는 시민불복종을 체제 보완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까지 인식했다. 롤즈에 따르면, “입헌정부 하에서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적절히 행사된다면, 이는 정부를 보다 확고히 정의롭게 만드는 안정장치가 될 것이다”(양건, 1990, 72) 정리하자면,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존중의 한계 안에서 행해지는 불복종”이며,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제도화된 저항권’이라 부를 수 있다. 즉, 시민불복종은 비록 법을 거스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해야 한다(양건, 1990, 66; 오현철, 2001, 39; 오현철, 2001, 41-42).

롤즈는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첫째, 공적인 행위여야 할 것 둘째, 비폭력적일 것 셋째,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일 것 등을 제시했다(롤즈, 1990, 376)⁷⁾. 공공의 행위, 공공 원칙에 관한 행위일뿐만 아니라 공공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심사숙고된 비합법 항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조건 요인들은 다른 형태의 저항 행위인 폭동, 혁명적 불복종 그리고 혁명과의 차별성 속에서 보다 정확한 개념화가 가능하며, 저항행위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의 동적 전

7) 시민불복종은 공개성, 공공성, 의도성, 비폭력성, 위법성, 불가피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공개성, 비폭력성, 불가피성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오현철, 2001, 37)

한 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저항 행위의 특징을 표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저항행위 분류⁸⁾

행위 특징	폭동	시민 불복종	혁명적 불복종	혁명
대상 및 목표/ 체제에 대한 태도	· 다양한 층위와 사안에 대한 감정적 분노의 폭발 · 정확한 지향 부재	· 법률, 정책 반대 · 현존 국가의 체제와 질서 존중, 유지 지향	· 현존 국가의 기본 구조 인정 · 정부의 전복 목표	· 현존 국가의 체제와 질서에 대한 전복 목표
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의도적 법률위반 · 법률 무시	· 의도적 법률위반 · 법률 존중	· 의도적 법률위반 · 법률 무시	· 의도적 법률위반 · 법률 무시
저항 방법	폭력	비폭력	폭력/비폭력	폭력
위험감수 여부	위험 감수 안함	위험 감수	위험 감수	위험 감수

시민불복종은 시민성이 발현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제한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폭발이나 맹목적인 분노의 배출로 표현되는 폭동과 다르다. 또한 폭동은 정확한 미래에 대한 지향이나 대안이 부재한 감정적 행위이므로 폭동에 참여한 자들은 체포나 처벌의 위협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혁명적 불복종은 목적과 방법에서 혁명과 시민불복종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혁명적 불복종은 현존 국가의 기본 구조를 인정하고 현 체제 내에서 주로 정부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저항이다. 혁명적 불복종과 시민

8) 중국학자로는 위젠룽(于建嵘) 등의 연구자들의 경험적 사례 연구를 통한 이론화는 중국 저항 연구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명한 농민문제 연구가인 스캇(Scott, 1977)은 농민의 저항을 일상 저항(everyday resistance)으로, 오브라이언(O'Brien, 1996)은 정당한 저항(rightful resistance)으로, 위젠룽(于建嵘, 2008)은 '법으로써의 투쟁'(以法抗争)으로 해석하는 분석들을 제시하였다.

불복종 간에 엄밀한 실천적 경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론적 방법론적 구별이 있을 뿐이다. 시민불복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혁명적 불복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혁명적 의도를 띤 불복종 운동이 시민불복종 운동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1980년대 이후 아시아의 민주화 물결이 바로 이 혁명적 불복종에 의해 이끌어졌다.

또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도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혁명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의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은 현존하는 정부의 전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국가나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시민 불복종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위반한다는 점에서는 혁명과 동일하지만 목적과 방법에서는 혁명과 전혀 다른 저항 방식이다. 시민불복종은 특정 법률이나 법규를 위반하지만 전체 법체계와 현존하는 국가와 정부의 권위를 수용하는 반면, 혁명은 그렇지 않다. 시민불복종은 현존하는 정치적 권위의 기본 구조 내에서 행동하지만, 혁명은 기본 구조를 폐기하려는 행위이다(오현철, 2001, 49-51).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이론은 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은 시민 개개인이 정당한 법 질서 하에서 다수결의 결정을 비폭력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양심적 권리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법에 대한 불복종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바로잡고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시민불복종은 헌법 질서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전면적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체제 내의 정의 실현과 정당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 내 저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는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권력 분립, 정치적 경쟁의 보장과 같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저항은 체제에 대한 도전과 전복으로서의 지향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불복종론을 권위주의 체제에 적용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시민불복종론은 체제를 불문하고 ‘정의’에 대한 실천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정의’에 대한 언어가 억압된 권위주의 체제에서 시민불복종론이 갖는 윤리적·정치적 기준은 저항의 도덕성을 정당화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는 그대로 적용이 아니라 ‘기준점으로서의 활용’ 가능하다. 우리가 시민불복종론을 통해 주지해야 할 것은 그것의 지향과 제도 내에서 그 지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행위로서의 가치이다. 한국에서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오현철은 오늘날 사회제도에서 판단해야 할 정당성의 기준은 절차적 완결성이 아니라 인간적 가치의 실현임을 제시한다. “과거에 인식할 수 없었던 인간적 가치 또는 이미 인식되었지만 정의롭게 실천되지 않았던 가치를 얼마나 잘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을 “사회적 분화 과정에서 전문화된 지식에 맹종하지 않고 보편적 인간의 휴머니즘과 상식에 의거하여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표출해내는 저항 의지의 한 형태”로 정리한다(오현철, 2001, 9). 시민불복종은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다(오현철, 2001, 41-42).

실제 시민불복종의 저항은 부정의한 법률, 침략적이고 부정의한 전쟁, 심각하고 불공정한 조세 정책,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것 외에도 인종 차별을 하거나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대한 불복종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공적 삶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톨스토이의 집총 거부권, 간디의 비폭력 저항, 그리고 1950년대 미국 흑인들의 시민권 획득 투쟁과 1968년 전쟁반대 등은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 행위들이다. 미국의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소로우는 자신의 저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이 미국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 나는 대답한다. 수치감 없이는 이 정부와 관계를 가질 수 없노라고 말이다. 나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적 조직을 나의 정부로 단 한 순간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을 때는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권리 말이다.”(소로우, 2009, 16)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일반 원리로 재단하기 어려운 역사적 맥락과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불복종론의 원리를 권위주의 맥락에 맞게 수정·변안함으로써, ‘폭력-비폭력’, ‘합법-불법’, ‘내부-외부’라는 이분법을 넘는 새로운 저항의 범주를 개념화할 수 있다. 실제 현재 중국에서는 침묵·기만·법률적 활용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불복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항이론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로써 권위주의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저항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과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민불복종의 이론은 단지 체제 전복이 아니라 정치사회 내부의 ‘공민성(civiness)’을 누적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의 권위주의는 통치방식과 제도화의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며, 권위주의 국가의 국가-사회 관계를 대립적, 전복적 관계로 일반화할 수 없는 내적 복잡성을 가진다.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의 저항을 체제에 대한 도전과 체제 전환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간과하는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제도화가 진전된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저항을 통해 측정해야 하는 것은 전환기의 정치문화의 변화와 축적이다. 기존 시민불복종론에 대한 변형적 재해석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에 공민적 저항의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체제전환적 시각에서 벗어나 억압 체제 속에서의 ‘합리적 저항’과 ‘권리 인식’의 정당화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 권위주의적 조건 하에서 공민 주체가 수행하는 전략적·윤리적 저항의 개념화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

2. 시민불복종 이론의 중국 내 적용과 공민불복종 개념화의 가능성

현재 중국에는 수많은 불복종의 실천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불복종을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믿는 국가의 법이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하는 공공적이며 법에 반하는 비폭력적 저항 행위라고 할 때, 중국에 대한 개념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서구와 중국의 역사, 정치체제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한 조건상의 차이는 가장 근본적인 제약요인이다. 첫째,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중국은 정치체제가 상이하다. 시민불복종은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체제를 제도적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권위주의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의 성격은 시민불복종에서 상정하는 조건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는 주체의 상이성이다. 체제의 차이는 그 체제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주체의 상이성을 만들어낸다. 즉, 시민불복종의 시민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시민의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각성하고 그에 기반한 시민성을 가진 주체이다. 시민불복종은 그러한 시민성의 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적으로 말해서, 중국에는 “시민”과 완전히 동일한 불복종의 주체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는 시민과 유사한 개념인 “공민”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민이 주체가 되는 불복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할 수 있다.

체제와 주체라는 제약적 조건에도 시민불복종에 대한 중국적 맥락의 속고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첫째, 시민불복종의 “불복종의 정당화” 논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독재라는 체제의 상이성을 희석시킨다.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성격을 불문하고 저항의 정당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에서 시민의 저항을 정당한 권리로 확정해 가는 또 하나의 투쟁이었다. 주지해야 할 것

은 시민의 저항과 불복종이 억압받는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입헌 질서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불복종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계약론과 자연법에 근거한 입헌민주주의의 토대에서 성립된 서구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 주권 및 개인의 권리 발현의 원리와 작동 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때문에 서구 입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저항은 법적 정당성, 다수결의 원칙과의 양립,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중시 등 수많은 질문 속에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다. 로스토우(Eugene V. Rowstow)는 시민 불복종을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부인했다. 그는 동의에 의한 사회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민 간의 평등의 원리를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비판했다. 로스토우는 시민 불복종을 인정한 사회에서 사회 질서의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회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양진, 1990, 71). 시민불복종의 조건으로 제기된 '불가피성' 또한 같은 맥락의 입장이다. 즉 시민불복종은 제도 내에서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오현철, 2001, 41-42). 이러한 입헌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그에 대한 불복종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성을 강하게 수반하고 있었다. 때문에 시민불복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한 철학적 배경을 규명하는 학술적·법리적 논의와 함께 '법 체제 안에서의 위법'이라는 방법론적 합리성을 수립하는 실천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불복종 개념의 중국 적용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현재 중국에서 불복종 또한 원리적·정치적·제도적 측면에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 대중이 주인인 사회주의 체제, 전위부대로서의 영도적 지위를 갖는 공산당의 지배 정당성 하에서 공산당과 국가에 대한 저항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거국적 목표를 위해 인민대중을 동원하는 체제하에서 인민 대중

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저항권은 발전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법치의 발전을 통해 중국 국민의 권리 발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법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 체제적 조건에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중국 적용은 “법치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제도적 저항권 연구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꾸준한 법치 강화는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민대중의 불복종에 대한 법체계 안에서의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시민불복종은 의도적인 위법행위이기는 하나, 그것은 헌법 체계 자체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그 정당성 또한 법률적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선거가 시행되지 않는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체제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헌법질서를 수립하고 법제화를 통해 국가의 권한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도화를 진전시켜왔다. 중국은 협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1982년 헌법은 1975년과 1978년 헌법에서 철폐되었던 ‘공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는 1954년의 헌법 규정을 재삽입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화를 강조하면서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제2장)를 국가 기구(제3장)에 관한 조항보다 앞에 배치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1982년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 앞에서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는 것, 개인의 존엄성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불법적인 구금을 금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을 22개 조항에 걸쳐 명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자유권과 관련하여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언론, 표현, 집회, 결사, 행진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8기 3중전회에서 거버넌스 개혁의 본격적 추진을 공식화하고, 민주보다는 법치가 중국의 현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以法治国)”을 천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법에 기반하여 통치과정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서구사회의 시민과 완전히 등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대 중국의 국가와 사회 모두 사용하고 있는 공민 개념은 중국 저항이론 형성의 중요한 가능성 제공하고 있다. 중국적 해석에서 공민은 ‘특정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연인이며, 즉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민이 부여받는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의 의미는 시민과 유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공민 개념은 정치적 의미가 강한 인민과 차별화되면서 현대 중국에서 ‘공민’이라는 법적 권리에 기반한 정치적 의식을 각성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 “공민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공민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사회적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법의 폐지 혹은 수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왔다. 중국에서 신공민운동, 2000년대 후반 등장했던 “신공민 운동”이나 2003년 수용송환제도 폐지, 2012년 노동교양제도 철폐등이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정주영, 2016 ; 정주영, 2017).

넷째, 중국의 전통적 천명사상과 역성혁명(易姓革命)은 “저항”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중국 전통적 정치 문화에서 “民”은 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權”을 갖지 못하는 존재이다. 19세기 이후 ‘민권(民權)’의 개념이 등장하지만 이 또한 구망도존(救亡圖存)의 목표에 압제되어 개인의 존엄과 권리의 존중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袁兵喜, 2011, 83-84). 그러나 매우 제약적인 권리의 개념인 “民”은 “天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왕에게 저항할 수 있는 역성혁명의 권리를 갖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때의 천명사상에 기반한 민중의 저항은 ‘체제수호를 위한 저항’이 아니라 ‘자연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혁명’이다(李秋高, 2011, 134).

3. 공민불복종의 개념화와 중국 저항 분석의 이론적 확장성

시민 불복종 개념은 중국에 적용함에 있어 완벽하게 이론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법적 저항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제약적 상황에서 시민성의 결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하고 있다. 현대 중국에서 일어나는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저항 행위를 공민불복종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 저항행위에 대한 세 가지 특징에 기반한다. 첫째는 “공민”으로서의 행위주체의 법적 자격과 자기인식,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즉 ‘공민권’이다. 현대 중국에서는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공민’ 혹은 ‘공민권’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적 해석에서 공민은 ‘특정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연인이며, 즉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어의 ‘citizen’과 ‘citizenship’의 역어로도 사용되는 이 두 용어를 서구적 개념 내용과 그 대로 등치시켜 이해할 수는 없다. 청왕조 말기에 중국에 도입되어 20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대유행한 이 용어들은 서구적 개념어가 중국에 그대로 이식되었다기 보다는 중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의 토양 위에 탄생한 새로운 변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시민권의 정의를 근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권이자 그 자격의 획득을 통해 보장받는 권리라고 할 때, 이는 현대적 의미의 ‘공민’ ‘공민권’과 맥락적 동일 의미를 갖는다. 중국에서 ‘공민’ 개념은 서구의 ‘시민’처럼 사적 재산권 보장의 의미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헌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정주영, 2015). 공민 개념의 보편화는 인민으로 규정된 국민만이 배타적 민권을 누리는 국가에서 국적 소유의 모든 국민의 권리가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장받는 국가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즉 정치적, 역사적 주체로서의 인민이 아닌 법적 존재로서의 공

민이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법적 존재로서의 공민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가지면, 따라서 “공민”으로서 자기 인식은 곧 “권리”에 대한 인지를 파생시킨다. 이것인 현대 중국 저항행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된다. 즉,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저항행위는 공민이 갖는 권리에 대한 인식과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공민불복종’의 개념은 중국 사회에서의 변화하는 정치적 주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중국에서 ‘공민’은 시민과는 달리 국가와의 관계에서 보다 제도적인 역할을 가지는 존재로,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전환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민불복종은 기존의 민주적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불복종과는 다른 차원의 저항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도 내에서의 비판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불복종 행위의 체제 인정 혹은 유지 성향이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의 모순과 역설에서 비롯된 민생 위주의 대중적 요구와 기층의 저항은 급증하고 있으며, 행위주체와 목표 그리고 저항 행태의 측면에서 다양화되고 있다. 노동자, 농민, 학생, 도시 거주민, 일반 대중들은 중국 전역에서 청원, 집단 항의, 평화시위, 파업, 데모, 행진, 점거, 교통방해, 심지어 대규모 폭동까지 다양한 저항의 형태들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저항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자신에게 부여된 재산권 행사나 각종 권리에 있으며, 국가나 체제 전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⁹⁾

⁹⁾ 중국학자로는 위젠룽(于建嵘) 등의 연구자들의 경험적 사례 연구를 통한 이론화는 중국 저항 연구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명한 농민문제 연구가인 스캇(Scott, 1977)은 농민의 저항을 일상 저항(everyday resistance)으로, 오브라이언(O'Brien, 1996)은 정당한 저항(rightful resistance)으로, 위젠룽(于建嵘, 2008)은 '법으로써의 투쟁'(以法抗争)으로 해석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합법적 저항이 불가능한 권위주의 체제에서 저항의 방식이 다양화된 우회적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즉, 물리적인 저항이 아니라 ‘감추어진 정치성’, ‘숨겨진 의미 생산’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Scott, 1990; Yang, 2009). 저항은 종종 침묵, 암시, 상징, 유머, 은폐, 디지털 은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되며, 정치적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공개적 연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다수는 익명성과 탈정치적 언어로 행위한다. 따라서 이상의 비가시적 정치 행위, 일상적 저항, 상징적 불복종을 포괄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서구 시민불복종과는 구분되며, 권위주의 체제 내부에서 국가에 의해 규정된 주체성과 허용 가능한 행위의 범주 안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저항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틀로서 “공민 불복종”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자각적 공공성을 갖는 명확한 주체의 존재,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 체제 전복이 아닌 체제 수정적 목표와 지향, 비폭력적 위법행위이라는 시민 불복종의 최소 정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수용하되 중국적 맥락에서의 차이를 수용하여 개념화한 공민 불복종은 다음의 내용과 특징을 갖는다.

우선 공민 불복종은 법치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행해지는 체제 전복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국가의 정당성에 도전적 의미를 갖는, 비폭력적이지만 위법적인 공민의 공적 저항행위로 정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 주체성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권위주의적 규율 속에 있는 ‘공민’을 특징으로하며, 행위 양상으로는 집단적·비폭력적인 사회적 요구 중심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정당화 전략의 측면에서 민주화나 보편적 정의보다는 체제 내 법과 규범을 근거로 한다.

공민 불복종에서 공민은 법률상 신분과 권리에 의거해 체제 내 언어(법, 헌법, 절차)를 무기로 삼아 저항을 시도하는 전략 주체이다. 그들은

우선 법률에 근거한 권리 담론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온라인 검열이나 부당 구금을 문제삼는 방식은 단지 체제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이념과 제도를 스스로 활용하여 국가를 상대로 권리 주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 프레임 내의 불복종을 한다. 즉, 공개 시위 대신 법원 제소, 언론 노출, 공적 발언의 형태로 ‘제도 안의 저항’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국가-개인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시 이중적이다. 공민의 저항은 체제의 ‘법치 정당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이를 억제하면서도 완전한 억압보다는 통제와 유도 전략(검열, 조기 개입 등)을 병행한다.

여러 가지 개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민 불복종 개념의 차용을 통해 중국 대중의 국가에 대한 저항 행위 분석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즉, 시민 불복종의 이론적 토대(비폭력, 공개성, 법에 대한 존중, 정치적 목적)를 바탕으로 하되,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저항의 형태를 반영한 조작적 개념으로서의 공민 불복종을 하나의 분석틀로 중국의 저항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근대화론에 기반한 성급한 단정(斷定)의 오류를 피하고, 중국 공민의 체제내 저항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저항행위(폭동, 혁명적 불복종, 혁명)과의 비교 및 전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점에 있다. “공민불복종” 개념은 단순히 새로운 명칭이 아니라, 기존 이론들이 포착하지 못한 중국 특유의 억압 구조 내에서 발현되는 공적 저항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개념이다. 공민불복종은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공민의 역할과 그에 따른 저항 방식, 그리고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저항의 경계 등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적 공간을 제시하며, 기존 질서와의 ‘균열’을 형성하는 과도기적 저항 형식을 포착할 수 있는 중간 개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권위주의 체

제의 경계 안에서 발생하는 시민 주체의 자각, 공적 공간에서의 행위 실천, 정치적 긴장과 윤리적 선택이 복합된 실천양식으로, 중국의 민주화와 정치변동 논의에서 새로운 분석 단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IV. 중국 공민 불복종의 궤적과 변형

1. 저항 역사적 기점으로서의 천안문 시위

1989년 4월 15일 개혁파인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과 추도의 과정에서 발발한 천안문 사건은 중국 최대의 대중 시위로서 중국 공산당의 개혁의 지체와 부작용에 대한 당시 지식인의 저항운동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천안문 사건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해석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간단히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다. 본 고에서는 천안문 사건을 공민 불복종의 최소주의적 요소인 주체의 측면, 체제에 대한 인식, 시위에서 저항의 대상과 시위대의 지향 그리고 시위의 방식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천안문 사건은 자율적인 시민들이 모인 자발적인 대중운동으로 대학생, 지식인,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시위를 시작하고 전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대학생과 지식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인민'의 개념에 포괄되는 주체보다는 서구적 시민에 가까운 권리의식과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1980년대 이후 신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서구적 정치이념과 체제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이전 세대와

는 다른 사회적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1978, 79년의 민주의 벽 운동, 1986년 학생운동과 1989년 천안문 사건까지 당시 시위 참여자들이 단순한 감정과 분노의 분출이 아닌 사회변혁의 이론과 지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천안문 사건은 서구적 시민성에 유사한 공민성이 발휘된 저항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민성의 발현을 곧 서구식 시민사회의 성립과 등치시킬 수는 없다.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은 완벽하게 서구적 의미의 시민이 아닌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공민으로서의 정치의식과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서구적 의미의 완전한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유교전통문화에 기반한 위계적 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시위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태도나 다른 사회적 집단과의 연대활동에 표출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자신들을 역할은 국가와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관료제,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과 행위로 천안문 시위 당시 다른 사회적 집단과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리 끌레르 베르제르(Marie-Claire Bergere)는 당시 지식인과 학생들은 모두 '덕'이라는 윤리 아래 국가에 청원하는 형태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천안문 사건은 체제전복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발발 당시 중국 당국은 물론 해외의 견해도 천안문 사건을 중국 체제에 저항하는 반체제적 시위로 규정하였다. 1989년 4월 26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천안문 시위를 "계획적인 음모이며 동란으로 그 본질은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한 것으로 당 전체와 전국 각 민족 인민 앞에 놓인 엄중한 정치투쟁"으로 평가했다. 덩샤오핑의 계엄연설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유지되었다.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건의 요인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화평연변' 전략에 중국 反혁명 세력들이 동

조한 것으로 제시하고, 천안문 사건의 무력진압은 학생과 인민을 진압한 것이 아니라 反혁명폭란을 수습한 것으로 정당화했다. 서방 세계 또한 대체적으로 1989년 천안문 운동을 전체주의적 독재에 저항한 반체제적 민주화 운동으로 간주하면서 당시 중국공산당의 무력진압의 야만적 성격을 비판해왔다(이흥규, 2019). 그러나 당시 천안문 광장에 모였던 학생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중국 대중들이 과연 반체제적이고 혁명 지향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후에 진행된 천안문 시위대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많은 이견이 제시되었다. 천안문 시위의 요구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이 아닌 애국적 사회주의로 호명되는 사회주의 체제 내 민주화 개혁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었다(하남석, 2016 ; 이흥규, 2019).

당시 천안문 사건의 기존 체제에 대한 유지 지향성은 시위의 요구와 방식을 통해 더 잘 보여지고 있다. 시위의 발발 요인은 부패, 빈부격차 등의 고질적인 현실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이것은 구체적인 시대적 정황과 요구는 다르지만 문화대혁명과 그 외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걸쳐 발발하였던 다른 시위와 동일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천안문 시위는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와 개혁의 부진으로 인한 한계 등, 경제개혁의 부작용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 당시 만연해 있는 정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부정부패한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와 시장화를 주도해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 국가를 비판하고, 이를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 이익을 재조직하기를 주장하였다. 마리 끌레르 베르제르(Marie-Claire Bergere)는 당시 시위대가 새로운 민주적 정부를 탄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좋은 정부'와 '좋은 당'으로 개혁되길 희망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와서스트롬(Jeffrey Wasserstrom)은 1989년 시위 주도한 학생들이 1919년 애국적 5.4 운동의 전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

석했다(하남석, 2016, 51).

이들의 시위방식은 당시의 시위가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내 수정적 성격이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안문 시위는 비폭력적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단식 등의 전형적인 시민 불복종의 저항 방식을 보여주었다. 인민대회당 앞에서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상소문을 바치는 퍼포먼스 등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지식인 지위 회복 및 자신의 애국적 행위가 국가에 의해 매도된 것에 대한 복권 요구는 체제 내에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천안문 시위는 중국 공민불복종의 계보에서 하나의 '원초적 단절'을 상징한다. 이는 단순한 항의 행위를 넘어, 중국 내에서 자율적 공공성과 시민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결정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종은 중국 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포섭되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 전복'이라는 낙인이 씌워짐으로써, 정치적 저항의 언어 자체가 사회에서 말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이후 중국 사회에서 '공민'이라는 말이 국가가 부여한 법적 신분은 있어도, 정치적 주체로서의 실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수렴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Goldman, 1994).

2. 백지시위와 새로운 공민성의 등장

백지시위의 직접적 발발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2022년 11월 24일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었다. 당시 당국의 제로코로나 정책하에서 봉쇄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의 사상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사건 다음날인 11월 25일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사망자 추모 집회가 열리고 사고 원인 진상규명이 주장되었으며, 시위가 수도 베이징을 비롯 전국 전역의 대학가,

해외 화교사회 특히 주로 유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시위 참가자들이 아무것도 씌여있지 않은 빈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면서부터 “백지시위”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동참한 시위의 규모와 “중국공산당 타도”, “시진핑 퇴진” 등의 급진적 정치 구호의 등장, 2년여에 걸친 중국당국의 무관용 방역 정책으로 인한 중국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 반체제 저항 운동으로 전환될 것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던 사건이었다.

백지시위 역시 천안문 시위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으며,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며 확대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중국에서는 공민의 권리에 입각한 다양한 운동과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공공 지식인의 등장과 인터넷 매체의 발전, 중국의 세계사회로의 진입을 통한 중국 대중들의 의식적 변화 등은 2003년 송환제도의 폐지, 2012년 노동교양제도의 폐지 등 여전히 체제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공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꾸준히 확대시켜왔다. 2010년부터 중국 인터넷 상에 등장한 신공민운동의 주도자로 체포된 쉬즈용(許志永)은 2014년 1월 재판정에서의 최후진술에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신공민운동은 모든 중국인이 정정당당하게 공민이 되어 공민의 신분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민이고 국가의 주인이며, 신민도 순민도, 평민도, 폭민도 아니다. 공민의 권리를 인식하자. <세계인권선언>과 중국 헌법에 써있는 선거권, 언론자유, 신앙의 자유 등의 천부적 권리를 영원히 백지일 수 없다...” 또한 신공민 정신을 자유, 공의(公義), 사랑으로 제시하며 “개인의 자유, 아무런 구속을 받지않고 진실로 즐거운 ‘나’는 국가와 사회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한다(Xu, 2014).

중국 정부의 법치 건설은 중국 공공 지식인 특히 법률인들에게 시민권

관련 활동의 보다 넓은 공간과 근거들을 제공해주었다. 중국 정부는 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주장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법률가와 언론인들은 시민권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공공 지식인”의 역할을 자임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일반 시민 활동들은 합법적 활동의 경계를 확대해가는 경향을 보였다(Kelly, 2006:200-201).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공공지식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구속이 자행되었으며, 중국 당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깊숙이 관리와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10여년간의 시간동안 발전시켜온 중국 공민의식의 성장은 중국에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저항행위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 코로나 초기 정부의 정보 은폐와 초동대처 실패, 강압적 봉쇄정책 등에 대해 중국 공민들은 온라인 상에서 중국 당국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저항을 했다. 백지시위는 2020년 리원량(李文亮) 의사의 사망과 당국의 사실 은폐에 분노했던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각성이 긴박한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진화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못했으며, 이번 우루무치 화재 사고를 계기로 재점화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백지시위의 체제 저항적 성격이 부각된 것은 우루무치 봉쇄 해제, 신장 봉쇄 해제, 중국 봉쇄 해제 등 방역 정책과 관련된 초기 시위 구호에서 점차 “중국공산당 타도”와 급기야 “시진핑 퇴진”의 구호가 나오면서였다. 이후 시위의 참가자들은 빈 종이를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의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며, 아무런 글도 쓰지 않고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음으로써 당국의 참여자 처벌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때부터 “백지시위”로 불리게 된 이 저항행위는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체제하에서 제한받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 백지시위가 자유·권리와 같은 정치적 요구가 포함된 시위로 발전하는 데는 지식인 집단이 중시하는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이는 “우린 봉쇄가 아닌 자유를 원한다. 우린 통치자가 아닌 투표를 원한다. 우린 거짓말이 아닌 존엄성을 원한다. 우린 시민이지 노예가 아니다.”라는 ‘백지시위’의 구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저항세력을 ‘외부의 적’으로, 반정부 여론을 ‘외세와 결탁한 반역행위’로 선전하는 등 과거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2019년)에서 보였던 반체제 대응 프레임이 재차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백지시위 참여자들에게는 명확한 반체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빠른 정책적 수용 조치에 시위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해산하였다. 중국 정부는 시위대에 대해 무력 진압과 인터넷상 관련내용 강령 단속 등의 강경한 대응을 하였다.¹⁰⁾ 한편으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빠른 수정 조치를 시행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2022년 12월 7일, 3년 가까이 지속해온 무관용 방역 정책의 일부완화를 발표하고, 2023년 1월 9일 의무 격리 조치 폐지와 국경 개방을 결정함으로써 일명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면 폐기하였다. 또한 백지시위 발생 직후, 지방 정부도 밀접접촉자 기준 완화, 격리 규제 완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14억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소통과 협의에 대해 유화적으로

10) 당초 방역과 관련된 경미한 형사 범죄는 선처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당국이 시위 참가자들을 색출해 비공개적으로 소환하고 일부는 구금하는 등 반정부 여론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중앙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적대세력 침투와 파괴 활동, 사회 질서 교란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지시위’와 관련된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만큼, 체포 및 구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우나, 일부 보도와 실종자들의 개인 인터넷 계정에 남아있는 메시지 등을 토대로 추정한 구금자는 100명 이상으로 알려진다. 휴먼라이츠 워치, “중정부에 ‘백지시위 참여자 즉각 석방하라,’” 『뉴시스』, 2023.01.27.

언급하였다(표나리, 2023).

또한 시위대는 법률을 위반하면서도 법률에 근거한 주장을 통해 법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였다. 시위 참여자들은 시위 발생 이전에 중국 당국이 발표한 ‘정밀방역’ 조치를 방역 완화 요구에 대한 명분으로 삼고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¹¹⁾ 시위대는 방역 철폐 시위에서 이를 언급하고 지방 정부와 경찰, 주민위원회 등 하부 조직들을 압박하였다. 공산당 지도부도 봉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밀 방역 기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실책”으로 돌리며, 오류를 일부 인정하되 책임 소재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23년 2월 7일 중앙정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 정치 안보를 철저히 수호하려면 사회 통치를 강화하고, 법치를 통해 모순을 조사하고, 갈등을 풀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하며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재차 ‘법치’를 강조하였다.

백지시위는 천안문 시위와는 달리 명시적 민주화 요구를 외치지 않았고, 조직적 지도자도 부재한 채 자발적이고 분산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는 중국 공민불복종이 체제의 감시와 억압을 우회하여 상징, 암시, 침묵의 언어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새로운 저항 전략의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집회 조직과 정보 공유는 기존 시민운동과는 다른 디지털 시대의 저항 양식을 상징하며, 이는 탈영웅적이고 수평적인 공민정치의 가능성을 내포한다(Hillenbrand, 2023). 이러한 백지시위의 사례는 전통적 시민불복종의 조건(비폭력성, 공개성, 도덕적 호소)을 일정 부분 충족하면서도, 중국의 정치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공민불복종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11) 2022년 11월 10일, 중국공산당 상무위원회는 전명 봉쇄 지양, 정밀 방역의 내용이 포함된 정책을 발표하였다.

3. 백지시위 이후, 금지된 기억과 저항의 여진

백지시위가 일어나고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면서 해외 언론들은 해마다 중국에서 당시의 시위를 기념하는 행사나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 이후 중국의 변화를 분석하고 백지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감지하게 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삼엄한 경계와 당시 시위에 참여하거나 이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혼란이다.

1989년 천안문 시위 34주년 중국과 홍콩에서의 추모집회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던 2023년 6월, 2022년 10월 백지시위의 전초를 알리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중국 ‘쓰통차오 현수막 기습 시위’의 장소인 베이징 시내 고가도로인 ‘쓰통차오’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도 애플리케이션, ‘바이두’와 ‘가오더’에서 사라졌다. 고가에 붙어 있던 ‘쓰통차오’ 간판도 사라졌고, 주변엔 경찰 인력이 배치되었다. 천안문 시위 34주년을 앞두고 긴장한 중국 당국이 지도 상에서 이곳을 아예 지워버린 것이다(MBN, 2023-06-02).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한 반감은 “낙서”라는 조용한 저항을 통해 표출되었다. 2022년 10월 15일에 베이징 중국영화기록관 아트시네마 남자 화장실 벽에는 “반독재 반핵산”이라는 커다란 낙서외에도 “자유, 선거, 존엄을 요구한다” “보통선거 만세, 투표로 정권을 창출하고 1인1표로 주석을 선출하라”는 글귀가 적힌 벽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10월 13일 베이징 하이톈구(海澱區)에 있는 고가도로인 쓰통차오(四通橋)에 내걸린 현수막에 적힌 글귀다. 상하이에서 며칠 뒤 발견된 낙서에는 쓰통차오 현수막 글귀에 더해 “창장과 황허는 거꾸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는 문구가 더해졌다(경향신문, 2022.10.18.). 이에 공안이 즉시 현수막을 뺐고 관련자 체포 관련 뉴스도 보도되지 않았으며, 중국 당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대응했다. 마오닝(毛寧) 중

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위 다음날인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시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관련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 검열 당국은 현수막 이미지를 올린 중국 소셜미디어(SNS) 위챗 게시물 수백개를 삭제하고 일부 계정은 영구 정지했다. ‘쓰통차오’, ‘베이징 현수막’, ‘나는 봤다’ 등의 검색어도 금지어로 등록했다. 그러나 현수막 소식은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시안의 한 자전거 대여소에는 “시진핑, 네 아버지는 네가 여기서 하차하길 원한다”고 적힌 팸플릿이 발견됐다. 이후 선전, 홍콩 등에서도 쓰통차오 현수막 문구나 시 주석에 대한 비판을 담은 문구가 발견되었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이에 적극 가담했다. 미국 시카고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분필로 쓰통차오 표어를 길바닥에 쓰고 “시진핑 퇴진, FxxK off”라고 적은 사진이 발견됐다.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에서는 “독재자 퇴진”이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었다. 서울 경희대 근처에서도 쓰통차오 문구를 인쇄한 벽보가 발견됐다. 해당 사진들은 주로 중국인 유학생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사진에 위치를 표시해 레딧, 트위터 등에 올리면서 퍼지고 있다. 이렇게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산발적 저항들은 계속 되었다. 이러한 조용한 불만의 표출이 우루무치 화재사건을 기폭재로 폭발한 것이 바로 백지시위이다.

1989년 천안문 광장 민주주의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에 전 세계를 놀라고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었다(DemDigest, 2023.11.4).¹²⁾ 그러나 정부의 빠른 대응과 시위대의 즉각적인 해산 이후 중국 당국의 엄격한 검열과 감시로 인해 가시적인 후속적 활동이 부재한 상황이다. 시위와 관련된 단어와 이름은 온라인에서 계속 금지되고, 시위 현장은 공안에 의해 차단되며, 2022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전

12) 프리덤 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마지막 주에만 17개 성과 지역에서 최소 72건의 시위가 열렸다(DemDigest, 2023.11.4.).

히 국가의 감시와 억압에 두려워하고 있다.¹³⁾ 시위 참가자들이 백지 시위에 대해 갖는 태도는 양가적이다. 그들은 한편에서는 공권력으로 받게 될 피해를 두려워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의 힘을 보았으며, 이것에 희망을 갖는다. 정부에 의해 금지된 기억(a forbidden memory)이 되어버린 백지시위에 대해 시위 참여자들은 희망과 무관심(hope and apathy)에 사로잡혀 버렸다(Reuters, 2023.11. 28).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은 백지시위를 통해 인민대중의 힘을 발견하였으며, 이 사건이 중국인들의 시민 의식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성하고 일어서야 함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다.¹⁴⁾ 그러나 일부 젊은 첫 시위자들이 정치적 각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도 경제 불황, 부동산 시장, 높은 실업률과 같은 일상적인 우려들에 의해 금방 압도당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 2022년 시위가 있었던 1년 후 주말에 더 이상의 시위가 없었으며, 뉴욕, 런던, 워싱턴 등 해외에 화교 커뮤니티에서 기념행사가 개

13) 시위대의 대부분을 차지한 젊은이들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대가로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 및 구금되었고, 그리고 일부는 사라졌다. 구금된 시위대는 며칠 또는 몇 달 후 석방되었으나 펑리파(Peng Lifa)는 시위 후 실종되었다. 온라인에 시위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구금된 19세 위구르 학생 카밀 웨이잇(Kamile Wayit)은 1년이 지나서까지 감옥에 구금되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수감자의 가족에게 위협과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실제 더 많은 시위 참여자가 구금되거나 강제로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Human Rights Watch, 2023.11.21.).

14) 트위터 계정이 시위 정보의 바이럴 통로가 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중국 예술가이자 블로거인 'Teacher Li'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의 시민 의식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광저우에 거주하는 30세의 시위자는 "감시 수위가 높은 중국에서 시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조를 받을 줄을 몰랐다."고 "드디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저는 여전히 꽤 비관적이지만 중국의 미래 정치 상황에 대해 덜 비관적으로 느꼈습니다!"

최되었다. 시위 현장에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있었다(Reuters, 2023.11. 28).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한 익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시위 현장을 찾아 거닐었을 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지시위는 천안문시위와 같이 “금지된 기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지시위는 정치적으로 무력하고 국가의 애국주의 교육에 의해 세뇌되었다고 인식되는 중국의 젊은 세대가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세상에 알린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백지시위(2022년 11월) 이후 중국 본토에서는 국가의 감시·통제 강도가 대폭 강화되었고, 시민 사회 조직은 더욱 위축되었기 때문에 "집단적 공민불복종" 사례는 매우 드물고 분산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정부 당국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행위들을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예방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상하이에서 열린 할로윈 축하 행사에서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의상과 시진핑 주석에 의해 소외된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죽음에 대한 광범위한 애도를 포함한 소규모 전복 행위(small-scale acts of subversion)가 있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자동 삭제되는 금지어(敏感词)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진화된 신조어와 밈 문화를 통해 물리적 집결은 없었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검열을 넘는 상징적 공민불복종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공민불복종적 성격을 집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도 드물지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중반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전역의 수십 개 도시에서 미완공 아파트 분양자 수만 명이 집단적으로 대출 상환을 중단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거부(停贷潮, Mortgage Boycotts)'를 들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악화의 상황에서 경제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현실적 좌절과 불만이 부동산 개발사의 부도와 정부의 무책임에 항의하는 계약

적 권리에 기반한 대중적 불복종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 주택 소유자들이 연합하여 미완성 부동산에 대한 대출 상환을 거부한 것은 비폭력적,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법적 행위(금융 계약 불이행)를 통해 체제 전복이 아닌 법적 권리 회복을 지향하며, 단순 청원이 아닌 제도 바깥에서의 자발적 행동 거부라는 점에서 불복종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¹⁵⁾

4. 공민불복종의 총위화

‘공민불복종’을 단일한 유형이 아닌, 시대적 맥락과 정치 조건에 따라 달리 구성되는 다층적·변증법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천안문 사건과 백지시위의 경우에도 모두 공민 불복종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두 사건은 역사적 맥락, 참여 주체, 저항 방식, 국가의 대응, 담론적 파급력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두 사건은 모두 공민불복종의 범주에 속하되, 형태와 총위가 다르다. 천안문 사건은 공민불복종이 가능하지 않은 체제에서의 첫 집단적 정치 불복종 사례 계보적 관점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방법상의 측면에서 보면 천안문 사건이 거대 서사와 정치적 이상을 전면에 내세운 직접적 도전으로 명시적 정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권위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이에 반해 백지시위는 천안문 사건 이후 공민적 자각 의식을 가진 새로운 주체의 등장과 함께 검열과 통제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저항 방식으로 표출된 불복종으

15) BBC, “中国“停贷潮”再起? 购房者称烂尾楼进展缓慢 要求政府更快行动”(2022. 9.21.) <https://www.bbc.com/zhongwen/simp/business-62968302> ; VOA, “中国爆发停贷风波近一年 多数烂尾楼未复工” (2023. 6.21) <https://www.voachinese.com/a/majority-of-china-s-stalled-residential-projects-yet-to-resume-20230620/7144861.html>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백지시위는 체제 내 검열 조건을 전제한 비가시적 저항의 정치성을 드러낸다. 백지시위는 은유와 상징, 침묵의 메시지를 활용하는 비가시적 정치 행위를 통하여 직접적 도전이 아닌 체제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천안문 사건이 '말할 수 있는 정치'를 추구했다면, 후자는 백지를 통하여 '말하지 않고도 말하는 정치(The Unspoken Word)'(Hillenbrand, 2023)를 창안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천안문은 '저항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백지시위는 '저항의 생존 전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천안문 사건과 백지 시위, 그리고 그 이후 저항의 형태들은 중국 공민 불복종의 형식과 층위가 단선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공민불복종은 시대에 따라 저항의 형식을 바꾸며 생존해왔고, 억압이 강할수록 더 창의적이고 상징적·우회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안문 사건과 백지시위, 그리고 그 이후의 공민 불복종적 저항의 사건들은 동일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저항 계보 안에서 서로 다른 단계의 실천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민불복종은 중국에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과 억압의 강도에 따라 변이하는 실천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V. 중국 공민의 조용한 전진

피렌boom(Peerenboom, 2007)은 중국의 지도자들과 인민이 '선거를 통한 정부 구성'이라는 민주화 경로를 자국의 발전 모델로 수용하지 않고, 국가의 부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유보해 왔다고 분석한

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사회경제적 권리의 확대와 법치의 심화를 통해 정치적·법률적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 대중의 힘으로 정치적 개혁 혹은 체제 변화를 달성하기란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저항 서사는 시위의 일상화·도구화, 그리고 제도적 언어를 통한 정당성 확보 등의 형태로 조용한 진전을 이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조직적이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발발하던 시위가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전국적 규모로 확대될 때, 이들 시위는 종종 ‘민주화’ 또는 체제변화에 대한 기대의 렌즈로 평가되곤 한다.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통제 능력과 대중의 수용성은 여전히 시위의 확산에 제약을 가하며, 이는 중국 대중의 저항에 대한 근본적 회의론을 남기고 있다. 더불어 ‘권위주의적 중국모델’의 부상은 중국의 정치개혁 담론을 권위주의 내부의 논리로 가둬버렸고, 그에 따라 사회적 발전 또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게 만들었다(Zhao Suisheng, 2003). 이러한 현실은 중국 대중의 저항을 보다 세분화된 미시적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천안문 시위와 백지시위는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시위에 참여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인민대중들이 공민으로서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으며, 시위는 사회·정치적 지향을 갖는 저항행위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두 시위 모두 체제전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좋은 정부를 희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도적인 법률의 위법행위가 자행되었으나 시위의 방법은 비폭력적이었고, 법체계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이 두 건의 시위는 ‘혁명’이나 ‘혁명적 불복종’보다는 ‘공민 불복종’으로 규정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실 공민 불복종과 혁명적 불복종 간의 실천적 경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전환될 수 있음은 시위의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결국, 시위의 성격 변화와 이에 따른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분석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시위에 적절한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내 저항행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부재 속에서 '시민 불복종론'을 바탕으로 중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공민 불복종론'을 잠정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천안문 시위와 백지시위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중국에서 발생할 저항 또한 '공민 불복종론'에 새로운 성찰을 제공할 것이다.

공민 불복종론을 통해 분석한 중국의 저항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 천안문 시위에서 주장되었던 공정과 도덕, 자유와 민주에 대한 요구가 그러했고, 백지시위에서 주장되었던 "우린 봉쇄가 아닌 자유를 원한다. 우린 통치자가 아닌 투표를 원한다. 우린 거짓말이 아닌 존엄성을 원한다. 우린 시민이지 노예가 아니다."라는 구호가 중국 저항의 지향을 보여준다. "인간은 불복종 행위에 의해 끊임없이 진보한 것이다"(오현철, 2001, 16) 에리히 프롬은 복종을 권력에 대한 순종 즉 타율적인 순종으로, 불복종을 이성과 확신에 찬 거부의 행위로 규정하였다. 불복종은 이성과 의지에 대한 확증의 행위로 이것은 "원초론적으로 무엇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향하는' 태도"이다.(에리히 프롬, 1996, 32) 이것이 천안문 시위와 백지 시위를 통해 우리가 강조해야하는 것이다. 곧 그것은 단순히 맞서는 것을 넘어서 중국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지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지향을 실현해가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이 저항행위를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 발시켜가는 것에는 많은 제약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국가의 통제와 감시가 그렇고, 중국 국민들의 인식을 가두고 있는 전통적·보수적 인식들이 또한 그렇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스스로 자신의 언어로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중국의 공민 불복종이 혁명적 불복종이나 혁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산당 혹은 시진핑 이외의 대안을 스스로 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안을 만들 수 없는 구조와 대안의 부재가 계속되는 한, 중국의 저항은 공민 불복종의 틀에 머무를 것이다.

한편, 중국 권위주의 체제는 저항을 제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안전한 저항의 형식’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민은 ‘저항할 수 있는 시민’으로 기능하지만, 그 저항은 제도적 언어와 절차를 활용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저항이 단순히 서구 시민불복종의 수용이 아니라, 중국 정치 구조의 내적 모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로 이론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결국, 중국 정치체제에서 ‘공민’ 개념은 단순한 제도적 용어를 넘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한 새로운 정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공민’은 국가주의적·의무 중심의 규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항 또한 헌법, 법률, 절차 등 국가 담론을 인용하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체제 내 불복종’이라는 특징을 형성한다. 공민불복종은 직접적인 정치비판보다는 제도와 법률 언어를 활용한 전략적 저항을 통해, 합법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저항의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2025년 4월 9일 접수, 4월 30일 심사완료, 4월 30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김영진. 1996. “중국의 경제개혁과 ‘총공회’의 역할 : 코포라티즘적 시각에서.” 『한국정치학회보』, 30집. 4호.
- 김재철. 1999. “편입과 제휴의 정치 : 개혁기 중국에서의 정치권력과 사회단체.” 『한국정치학회보』, 33집. 3호.
- 백영서. 1994. “중국에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나? : 역사적 관점에서 본 시민사회의 궤적.” 『아시아 문화』, 제10호.
- 서재진 외. 1998.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서울:생각의 나무.
- 양건. 1990. “시민불복종의 논리.” 『철학과 현실』, 9권.
- 오승철. 2009. “저항권이론의 재조명-혁명권·저항권·시민불복종의 통합을 위한 탐색.” 『민주법학』, 제40호.
- 오현철. 2001.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서울: 책세상
- 이홍규. 2019. “1989년 천안문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사회주의민주’의 구현을 위한 체제 내 민주화 운동.”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
- 에리히 프롬. 1996. 『불복종에 관하여』. 파주:범우사
- 정연식. 1999.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조합주의 : 중국과 베트남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3집. 2호.
- 정주영. 2001. “중국의 국가통제 양식에 관한 연구 : 국가조합주의적 시민사회 통제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 정주영. 2016. “노동교양제도의 폐지와 중국 공민권의 발전.” 『현대중국연구』, 제17집. 2호.
- 정주영. 2017. “강대국 중국의 정치발전모델 탐색: 소프트파워 자원이 될 수 있는가?” 『현대중국연구』, 19집. 3호.
- 정주영. 2019.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3집.
- 존 롤즈. 1990. 『사회정의론』. 서울: 서광사
- 표나리. 2023. “‘백지시위’와 중국의 시민사회:코로나19 방역정책의 전환을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06
- 하남석. 2016. “중국 지식인들의 1989년 천안문 사건 재해석:자유민주주의의 운동론과

신좌파적 해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0권, 제1호.
「MBN」“텐안먼 시위 34주년 앞두고 중국 통제 강화…뉴욕엔 기념관.” 2023. 6. 2
「경향신문」“시진핑 독재 반대” 조용하게 벌어지는 중국 낙서 시위.” 2022. 10. 18.

- Alexis de Tocqueville. 2000. *Democracy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n, Anita. 1993. “Revolution or Corporatism? Workers and Union in Post-Mao China.”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29)
- Cohen, Jean L. & Arato, Andrew.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IT Press
- Goldman, Merle. 1994. “The 1989 Democracy Movement.” in *Sowing the Seeds of Democracy in China: political reform in the Deng Xiaoping era*,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Feng, Xianghong. 2015. “Protesting power: everyday resistance in a touristic Chinese Miao village.”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13(2)
- Guang, Lei. & Su, Yang. 2019. “Collective petition and local state responses in rural China.” *Handbook of Protest and Resistance in China*. Jan01.
- Han, Liu. 2023. “A Systemic Interpretation of Social Rights in the Chinese Constitution Social Sciences in China.” 44(4).
- Henry, Eric S.. 2022. “The Long March to the White Paper Revolution : Understanding Recent COVID Protests in China.” *Anthropology Now*. 14(3)
- Hillenbrand, Margaret. 2023. “The Unspoken Word: White Paper Protests and the Politics of Absence.” *The China Quarterly*. 253
- Hung, Ho-fung. 2011. *Protes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 demonstrations, riots, and petitions in the Mid-Qing Dynast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John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Kin-man Chan. 2023. "Unwritten Endings: Revolutionary Potential of China's A4 Protest." *Sociologica*. 17(1).
<https://sociologica.unibo.it/article/view/16877>
- Li, Yuchen. 2024. "Is China headed for new White Paper protests?" (2024.11.25.)
<https://www.dw.com/en/is-china-headed-for-new-white-paper-protests/a-70880132>
- Linz, Juan. 1964. "An Authoritarian Regime: the Case of Spain." in Eric Allardt and Yrjo Littunen (eds.). *Changes, Ideologies and Party Systems*. Helsinki: Westernarck Society.
- Nathan, Andrew. 2003.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14(1)
- O'brien, Kevin J. & Li, Lianjiang. 1999. "Sel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Rural China." *Comparative Politics*. 31(2)
- O'brien, Kevin. 1996. "Rightful Resistance." *World Politics*. 49(1).
- O'brien, Kevin. 2006. *Rightful Resistance in Rural China*.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brien, Kevin. 2008. *Popular Protest in China*.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O'brien, Kevin. 2015. Repression Backfires: Tactical Radicalization and Protest Spectacle in Rural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4(93)
- Paik, Wooyeal, 2012. "Economic development and mas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ontemporary China: determinants of provincial petition (Xinfang) activism 1994-2002."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3(1).
- Peerenboom, Randall. 2007. *China Modernizes: Threat to the West or Model for the Res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Perry, Elizabeth J.. *Challenging the Mandate of Heaven: Social Protest and State Power in China*. Armonk, N.Y.: M.E. Sharpe.
- Read, Benjamin L.. 2003, "Democratizing the Neighbourhood? New Private

- Housing and Home-Owner Self-Organization in Urban China.” *China Journal*. 49
- Schedler, Andreas. 2006. “The Logic of Electoral Authoritarianism.” in Andreas Schedler (ed.). *Electoral Authoritarianism: The Dynamics of Unfree Competition*. Boulder, Colo. : L. Rienner Publishers.
- Scott, James C.. 1985. *Weapons of the weak :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Scott, C. James. 1977.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Scott, C. James. James C.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Scott, C. James. 1990.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horeau, Henry David. 1986. *Walden ; and, Civil disobedience*. New York : Penguin Books.
- Tomba, Luigi. 2002. *Paradoxes of Labour Reform: Chinese Labour Theory and Practice from Socialism to Market*. London: Routledge Curzon.
- Tong, James. 1998. “The 1989 Democracy Movement in China.” *Asian Survey*. 38(3).
- Unger, Jonathan & Chan, Anita, 1995. “China, Corporatism, and The East Asian Mode.”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33).
- Weigle, Marina A. & Butterfield, Jim 1992. “civil society in reforming Communist Regimes : The Logic of Emergence.” *Comparative Politics*. 25(1)
- White, Gorden. 1993. “Prospects for civil society in china : A Case Study of Xiaoshan city.”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Jan01(29)
- Xu, Zhiyong. 2014. “For Freedom, Justice, and Love.” Human Rights in China (HRIC)
- <https://www.hrichina.org/en/citizens-square/freedom-justice-and-love-xu->

zhiyongs-final-statement-trial

- Yang, Guobin. 2009. *The Power of the Internet in China: Citizen Activism Online*, Columbia University Press.
- Zakaria, Fareed. 2008. "China Shouldn't Be Inscrutable." *Newsweek* Vol. 152 Issue 6
- Zhao, Suisheng. 2010. "The China Model: can it replace the Western model of moderniz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
- Zhao, Suisheng. 1998. "A State-led Nationalism: The Patriotic Education Campaign in Post-Tiananmen Chin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1(3)
- DemDigest, "Spirit of China's White Paper protests still inspires." 2023. 11. 4.
<https://www.demdigest.org/spirit-of-chinas-white-paper-protests-still-inspires/>
- Human Rights Watch, "Echoes of China's White Paper Protests." 2023. 11. 21.
<https://www.hrw.org/the-day-in-human-rights/2023/11/21>
- Reuters. "One year on, China's COVID protesters caught between hope and apathy." 2023. 11. 28
- 陈利华. "中国群体性事件10年增6倍." 「新华网」. 2005. 7. 31.
- 毛泽东. 1949. "论人民民主专政"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建党以来重要文献选编』第二十六册. 中央文献出版社. 2011
- 于建嵘. 2008. "当代中国农民的以法抗争 - 关于农民维权活动的一个解释框架."
『文史博览 (理论)』12
- 张传鹤. 2010. "我国群体性事件的最新发展态势, 成因及对策研究."
『山东社会科学』5
- 张静. 1998. 『法团主义』. 北京 ; 中国社会科学出版社.

徐行·王海峰. 2010. “关于当前中国群体性事件几个理论问题.” 『学习与实战』, 7.

俞可平. 2002. 『中国公民社会的兴起与治理的变迁』社会科学文献出版社.

「中华人民共和国宪法」(2018年修正本),

https://www.gov.cn/xinwen/2018-03/11/content_5273222.htm

Abstract

Formal Rule-of-Law Authoritarianism and Civic Resistance in
China: Toward a Theory of Gongmin Disobedience

*Chung, JooYoung**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concept of "Gongmin Disobedience" by operationalizing the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within the Chinese context. Civil disobedience, as theorized in modern nation-states, refers to intentional violations of the law carried out to bring about changes in legislation or government policy. Although it involves illegal acts, it is characterized by respect for the existing legal and constitutional order and employs non-violent methods. However, the concept of civil disobedience does not fully align with the theoretical conditions present in China. Nonetheless, by accepting the core elements of a minimal definition of civil disobedience—namely, the presence of clearly conscious citizens, respect for law and order, a reformist rather than revolutionary aim, and non-violent illegal actions—it is possible to reconceptualize the idea in the

* Center for Chinese Studies, Academy of Chinese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hinese context as “Gongmin Disobedience.” This paper provisionally defines Gongmin Disobedience as illegal but non-violent acts of resistance by citizens within a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grounded in rule of law, without the aim of overthrowing the regime. Based on this framework, the study analyzes large-scale public protests in China, such as the Tiananmen Incident and the White Paper Movement.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acts of resistance, viewed through the lens of Gongmin Disobedience, express a strong aspiration for fundamental rights and go beyond mere opposition, embodying a vision for China’s development and future.

Key words : Gongmin Disobedience, Civil Disobedience, Authoritarian Rule in China, Chinese Politics, Resistance Theory, White Paper Protests, Tiananmen Square Protests,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